ISSN 1739-4325

교육정책네트워크

# 교육정책포럼

21 February 2019
www.eduforum.re.kr

통권 308


## 교육시론

■ 학교 밖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학력은 인정받는 체제가 왜 우리에게만 몽상일까?

## 현안문제진단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정책의 의미와 시사점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발전 방향 및 과제
: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을 중심으로

## 현장리포트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지원정책과 교육청의 역할

■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지원사업의 현장에서

## 외국교육동향

■ 미국 정부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정책 탐구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일본의 학력인정 프로그램

## 교육통계

■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통계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국가평생교육진흥원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Creativity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교육부
교육정책네트워크

교 육 정 책 네 트 워 크

# 교육정책포럼

통권 308

인터넷 주소창에 "교육정책포럼"을 입력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 Contents


## 04.
## 교육시론

학교 밖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학력은 인정받는 체제가 왜 우리에게만 몽상일까?

윤철경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장

## 09.
## 현안문제진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정책의 의미와 시사점

김성동 | 교육부 교육연구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발전 방향 및 과제 :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을 중심으로

김은영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이윤희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27873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7
**발행인** 반상진
**편집위원장** 윤종혁
**편집위원** 양희준, 신경희,
박성일(광주백운초), 정바울(서울교대),
손성호(교육부), 엄상일(경상북도교육청),
송경화(한국교육방송공사)
**편집실** 윤종혁, 임소현, 김규식, 최영철
**편집실전화** 043 530 9583
**등록번호** 진천 라00003
**ISSN** 1739-4325
**발행일** 2019년 2월 21일 제 308호/월간
**홈페이지** http://www.eduforum.re.kr
http://mailzine.kedi.re.kr
**디자인 및 인쇄** 리드릭·전화 02 2269 191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2019 비매품

본지의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표지설명**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겨울방학이 끝나갑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2019년 겨울은 야속하기만 합니다.
다소 따뜻했던 겨울을 뒤로 하고,
상쾌한 봄이 우리를 맞이하기 기대합니다.






15.
**현장리포트**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지원정책과 교육청의 역할

김병성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지원사업의 현장에서

국형진 | 전라남도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24.
**외국교육동향**

[미국]
미국 정부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정책 탐구

김지혜 | 교육정책네트워크 해외통신원

[일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일본의 학력인정 프로그램

김지영 | 교육정책네트워크 해외통신원

35.
**교육통계**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통계

한효정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FOCUS

# 학교 밖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학력은 인정받는 체제가 왜 우리에게만 몽상일까?

**윤철경**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장
E-mail: chyoon@nypi.re.kr

학교 밖 청소년을 연구하게 된 것은 순전히 연구자로서의 호기심이었다. 초, 중, 고, 대학, 대학원의 긴 시간을 거쳤고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갖기 전에는 학교 교사로서 삶을 살았기에 학교를 떠난 밖의 세상은 경험하지 못했다. 학교라는 체제를 전부로 알고 아이들을 교육시켜 온 나로서는 학교를 떠난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13년 776명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을 구축해서 5년간 조사해 온 결과, 복학이나 대안학교 진학, 검정고시 공부, 대입준비나 대학 진학 등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46.2%, 직업훈련이나 취업 등 경험을 주로 하는 직업형은 36.7%,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무업형은 17.0%로 나타났다(윤철경 외, 2017: 39). 놀라운 일은 학교를 떠난 후에도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5년 차 조사에서 대학을 다닌다는 사례가 40.9%였다(윤철경 외, 2017: 48).

이들의 주요 학업 형태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이다. 중단 후 1년 차 조사 결과에서 학업을 유지하는 청소년 중 검정고시 공부 68%, 복학 9.5%, 대안학교 8.5%로 나타났다. 중학생 연령(만13-15세)이나 고등학생 연령(만16-18세)에 상관없이 주로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검정고시 공부는 학교를 그만 둔 1, 2차년도에 집중되었고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윤철경 외, 2015: 115).

그렇다면 이들은 왜 국가가 교육비를 대주는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밖으로 나가 자기 돈을 들여 공부를 하는 것일까? 이들이 대체로 학교를 그만두는 주요 이유는 '학교에 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학교를 다니느니 검정고시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윤철경 외, 2013: 127). 대입이라는 목표를 향해 학년별로 꽉 짜여 있는 시간표와 수업 진도가 자신에게는 도움이 안 되고 배우는 게 없기 때문이다. 졸업장을 위해 참고 견디든지,

더 이상 참을 수 없거나 용기가 있으면 그만둔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학교를 그만둔 학생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했다. 영재교육, 글로벌 인재 교육에는 관심이 많았어도 뒤처지는 존재에 대한 포용교육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인구는 풍부했고 학부모의 계층상승 욕구에 기반을 둔 높은 교육열이 우수 학생을 뽑아 쓰고 나머지는 버리는 교육경쟁구조를 당연히 해 온 탓이다. 명문대학을 향한 입시경쟁이 곧 교육이었다.

인구는 급격히 줄고 교육경쟁에서의 승리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도 고도경제성장기 같지 않다. 학생들의 문화는 급변해서 교육경쟁의 대열에서 고요히 숨죽이고 있던 아이들은 이제 참지 못하고 아우성을 친다. 대부분의 교실에서 왕따 놀이가 횡행하고 절반 이상은 수업시간에 엎드려 잔다. 교사들은 교실 통제가 어려워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대입을 향한 입시교육은 변할 줄 모르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대입경쟁이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교육을 참아낼 수 있는 아이들은 줄었다. 그만큼 학교 교육의 유효성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연구를 하면서 유럽국가의 정책사례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다. 놀라운 점은 이들 국가는 이미 이삼십년 전부터 이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실행해 왔다는 점이다. 학교 밖 청소년 중 직업도 없는데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 청소년, 무업청소년(NEET)을 위한 정책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었다.

이들을 발굴하기 위한 세밀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고 이들을 일대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다양했다. 또한 학교 안과 밖 어디에서 교육을 받든지 용이하게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학교 밖 교육체제도 잘 구축되어 있었다. 유럽 국가들은 청소년 보장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는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에게 국가가 4개월 이내에 양질의 고용 기회, 교육, 훈련, 견습 기회를 책임지고 제공하는 정책이다.

스코틀랜드의 16+ 데이터 허브는 무업청소년을 발굴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중앙차원에서 세금납입정보, 직업훈련정보, 학생정보 등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을 연결하여 움직임이 없는 청소년을 찾아내면 즉각 지자체에서 개입한다. 'Next Step'은 이렇게 발굴한 17, 18세 청소년에게 6개월 정도 일대일, 또는 집단으로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이후에도 6개월 정도 더 지원할 수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조기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특화시설로 교육부가 설치, 운영하는 Youth Reach가 110개소, Community Training Center가 35개소가 있어 학교 복귀를 돕고 직업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있다[1]. 그리고 기타 청소년시설에서도 청소년 학업과 직업기술훈련을 돕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일랜드 국가역량체계(NFQ)[2]에서 중등학교 졸업자격은 4와 5레벨로 구분되는데 이들 기관에서는 보통 레벨 4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스웨덴은 19세까지 학교에 등록할 수 있다. 학령기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면 학교장이 지역 당국에 신고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지역 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청소년에게 접촉을 시도한다. 스톡홀름시는 16~19세의 모든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모니터링하여 무업청소년을 발굴한다. 스톡홀름시[3] 관내에는 이들을 지원하는 Job Center가 4개소 있고 Job Center 등록을 유인하기 위해 여기에 등록, 참여한 청소년만이 사회복지 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의 학교는 12개 직업교육과정과 6개 대학입학과정, 입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입문과정은 9년제 기초교육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시켜 직업교육과정에 들어가도록 지원한다. 지역 당국은 학령기 무업청소년을 발굴하여 입문과정을 실시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평생교육기관은 18~25세 무업청소년에게 고교졸업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각양각색의 제도를 발전시켜온 유럽 사회를 보면서 한국 청소년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를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어 학교를 그만두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편견과 차별을 견디며 정작 사회로부터 필요한 도움은 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무엇이든 배워야 할 나이에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이 사회적 도움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에서 쉽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 아일랜드의 Youth Reach와 청소년시설, 평생교육기관, 스웨덴의 Job Center와 학교, 청소년시설, 평생교육기관은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되어도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는 책임지고 교육기회를 부여한다. 학교로 복귀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고 거기서 얻은 자격이 국가역량체계로 통합되면서 학력이나 자격 단계를 상승시킨다.

1) 참고로 아일랜드 전체 인구는 500만명 정도이다.
2) 학위, 자격, 훈련을 통합시킨 체계
3) 스톡홀름시 전체인구는 2017년 기준 96만이다.

우리 사회는 학업을 중단하면 검정고시 외에는 학력을 취득할 길이 없다. 학력은 학교의 고유권한이고 학교와 학교 밖 기관의 경계는 엄격하다. 학력은 중요하다. 한국에서 고졸자의 무업비율은 전체 청소년과 비교할 때 20~24세에서 3배 이상, 25~29세에서 2배이다(윤철경 외, 2018: 278). 고졸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청년층은 노동시장 편입이 더 어렵다.

유럽국가의 사례들처럼 학교 밖 학습경험을 학력과 호환되는 자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밖 학습경험으로 학력과 호환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이나 훈련 편입이 훨씬 용이할 것이다. 한국의 평생교육은 학령기를 벗어난 성인학습자에게 학사 학위 등 고등교육 학력을 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 초·중·고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학력과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체제를 정립시켜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자격과 직업훈련 코스, 고등학교 졸업자격과 대학진학 코스, 아무 동기가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기강화 프로그램 등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청소년시설, 대안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마련해야 한다. 이는 우리 학교들이 스웨덴의 학교처럼 이러한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 몽상에 가깝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만 19세 미만 의무교육 미취학자나 학업 중단자의 경우, 교육이수 경력과 학교 밖 학습경험을 종합하여 학력인정을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1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5장 1절 제98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및 학습경험 보유자'가 추가되면서 이들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교육부, 2017.11.21.).

이때 인정되는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은 방송중의 온라인 프로그램과 6개 시·도가 제공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이다. 방송통신중학교의 학습경험인정 기준을 따르고 있다.

| | |
|---|---|
| ① 입학 전 검정고시 과목합격 (중졸·고졸학력) | ② 학력인정 대안학교 과목이수 |
| ③ 자격증 (국가기술, 국가전문, 공인민간) | ④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과목 이수 |
| ⑤ 중학교 학력인증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 | 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교육이수자, 전수생 |
| ⑦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 ⑧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교육과정 |
| ⑨ 공공직업훈련시설, 내일이룸학교 학습과정 | ⑩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증 프로그램 이수 |

만 19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검정고시밖에 없었던 데서 10개 영역의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학교 밖 학습경험을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다. 각 교육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강원도에서는 21명의 청소년이 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이 중 3명이 중학교 학력인정을 받았으며(강원도교육청, 2018.4.10.), 6월 기준 전남에서는 3명이 중졸학력을 인정받았다(전라남도교육청, 2018.6.19.). 아직 시범사업 단계이고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제의 성과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에 의하면 학교 밖 학습경험을 통한 학력 획득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차라리 검정고시가 수월하다고 한다.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제가 보다 실효성이 있으려면 현재와 같이 특정 영역을 인정영역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중졸학력, 고졸학력에 필요한 최소 기준 시수와 직업교육과정/특기교육과정의 인정 시수를 결합한 프로그램 인증제를 통해 학교 밖에서도 학령기 청소년이 초, 중, 고 학력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의미 있는 배움이 없어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배움이 없는 어둠 속에 갇히지 않고 지역사회 교육 시설에서 공적 재정 지원 하에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윤철경 선임연구위원은 교육사회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학교 밖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지원 대책 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연구, 위기 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 조사, 학교붕괴 실태 및 대책 등의 연구사업을 수행했다.

[참고문헌]

강원도교육청(2018.4.10.).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및 진학의 길 열다! 보도자료.

교육부(2017.11.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엄아람, 최은희(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3-R18.

윤철경, 최인재, 유성렬, 김강호(2015).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5-R17.

윤철경, 성윤숙, 최홍일, 유성렬, 김강호(2017).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7-R14.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이동훈(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Ⅰ :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8-R16.

전라남도교육청(2018.6.19.). 학력인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를 돕는다. 보도자료.

SUBJECT_01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정책의 의미와 시사점

**김성동** | 교육부 교육연구사
E-mail: ksdmm250@korea.kr

교육부에서는 2017년부터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학업중단 학생들에게 학교 밖 학력인정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발판으로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거나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곧 시범운영 3년 차를 맞이할 본 시범사업은 현재 전국 24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3개 지역 14명의 학생들이 동 사업을 통해 학력을 취득하였다. 아직 많지 않은 숫자이지만 등록학습자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시범사업 운영 교육청도 15개로 확대되는 등 전국 확산을 위한 착실한 걸음마를 내딛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여전히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지원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한다.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지원이 자칫 기존 학생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은 지난 1년간 본 시범사업을 담당하는 동안 가장 많이 들었고, 이겨내야만 했던 도전이었다. 이와 같은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지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학교 밖 학력인정 경로 확대가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논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 해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은 약 5만 명으로 이 중 해외출국, 질병, 미인가 대안교육 이수라는 이유로 그만두는 학생은 약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명확한 이유로 학교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도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으므로 소외계층으로 보기 어렵다. 문제는 나머지 30%이다. 개인·가정문제나 교우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부적응 사유' 학업중단학생은 쫓기듯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많고, 무관심 속에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간 연구들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가정환경이 열악하고, 비행경험(피

해경험을 포함한)의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불안정한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이들을 적시에 발굴, 지원하지 않으면 성장 가능성이 크게 저하되며, 사회적 부적응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신분의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이고 이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럴 때일수록 학교 밖 청소년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의 역할이 강조된다. 우리나라는 학력과 사회적 지위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은데, 학업중단학생들은 현실적으로 학교 복귀가 힘들기 때문에 학력 미취득으로 이어져 각종 불이익에 노출되기 쉽다. 학교 밖 학력인정 제도는 이들을 위한 대안적 학력인정경로로서 학교 밖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부에서는 학업중단학생의 학력인정 방법으로 검정고시를 꼽으며, 학교 밖 학력인정 정책에 대한 예산사용이 낭비라고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이미 검정고시 제도가 존재 함에도 교육부가 학교 밖 학력인정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이다.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 학생 중 일부는 학습능력 부족으로 검정고시 합격이 힘들다. 이들에게 대안적인 학력인정 경로를 마련해줌으로써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본 정책의 첫 번째 목적이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학습유도 및 내용의 다양성 측면이다.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은 학업중단 이전 경험을 포함, 일정 기간과 시수를 충족하면 심의를 통해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학력 취득에 적지 않은 기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학교 밖 학력인정 정책의 확산은 교과 지식을 중심으로 한 일회성 시험인 검정고시와 달리 학교 밖 학생들이 장기간 동안 지원기관과 관계 맺으며 상담 및 체험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학습을 이어가도록 유도한다.

세 번째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및 학력취득을 지원하고, 안전하게 상급학교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회로부터 배척받지 않고 보호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는 향후 그들이 분노와 불신이 아닌 신뢰와 안정감을 갖고 사회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제도의 정착을 위해 넘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 우선 본 시범사업의 전국 확산을 통해 전국의 학교 밖 학생들이 차별 없이 학력인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재 100개 안팎의 학교 밖 학습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학습자가 수요에 따라 맞춤형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계에 존재하는 학교 밖 지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극복하고 학교 안팎의 차별 없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 밖 학생을 향한 편견의 시선을 거두고 그들에 대한 지원을 낭비가 아닌,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마중물로 간주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김성동 교육연구사는 울산 성광여자고등학교, 전남 여수충무고등학교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에 파견 재직하며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SUBJECT_02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발전 방향 및 과제: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을 중심으로

**김은영**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E-mail: eykimedu@kedi.re.kr
**이윤희**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E-mail: leeyoonhee@kedi.re.kr

2017년 1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2항) 개정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기회가 확대되었다. 종전까지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검정고시가 유일하였으나, 상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교 밖 학습경험을 습득함으로써 초·중학교 단계의 학력을 인정받는 방안이 새롭게 마련된 것이다. 주지교과 위주의 객관식 시험 방식이 아닌, 학교 밖 학습자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학습한 결과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새로운 학력인정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및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이하: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학습지원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업대상은 학습자 등록일 기준 만 24세 이하의 초·중학교 미취학 및 학업중단학생으로, ② 교육감이 학력인정 가능 프로그램으로 심의·지정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또는 자격증, 직업훈련 등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을 이수하여, ③ 정규학교 교육과정의 80%에 해당하는 학력인정 기준 시수를 충족하였을 경우, ④ 전문기관(현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학력인정평가 및 시·도교육청의 학력심의를 통해 의무교육단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학교이탈을 조장하거나 조기 학력취득 등 악용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력 인정자는 초·중학교 졸업 연령을 초과해야 하며, 학력인정을 위한 일련의 학습 기간을 충족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교육부, 2018;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2018년 시범사업에는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전남, 충남, 제주 총 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였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강원, 전남, 서울 3개 시도에서 14명의 중학교 학력 인정자가 배출되었다. 학력 인정자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정규학교로 복귀하거나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학업을 지속하고 있다. 청소년이 학교를 벗어나는 이유는 다양하나, 초·중학교 단계의 학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경우는 학교 부적응, 학교폭력, 범죄,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소

외계층인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학습지원 시범사업은 현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 '복지'의 관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정책이라 하겠다. 사업의 명칭이 '학력인정'이 아닌 '학습지원' 사업이라 명명한 것 역시 학력인정이라는 결과에 중점을 두기보다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에서도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한다는 포괄적 목적을 표명하고자 한 것이다.

2019년에는 15개 시·도교육청(세종, 전북 제외)으로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학습지원과 학력인정의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 근거법령 개정 후 1년이 경과한 초기 단계의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시범사업 확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몇 가지 과제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에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시범사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 교과가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으며, 나아가 진로·직업 등 선택 가능한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응답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8).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정부·지자체 산하·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만 학력인정 가능 프로그램의 지정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지정·운영 중인 프로그램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친구랑, 평생학습관, 소년원 등 일부 기관에 국한되어 있다(학습지원 시범사업 홈페이지). 지정심의 면제프로그램으로 인정되는 평생학습계좌제에는 초·중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하여 학습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참여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프로그램 다양화는 양질의 교육을 위한 질 관리 방안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밖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공간적 제약 없이 학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 확충이 필수적이다. 현재 시범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학습자 등록 관리 및 방송중 온라인학습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다. 실제 학력인정자의 사례를 살펴보면,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방송중 온라인과정을 통한 학습 비중이 큰 편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아직 예산, 인력 등의 이유로 학습튜터, 상호작용과 같은 학습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초등단계 온라인학습과정은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요청된다. 또한, 학교 밖 학습자의 특성상 학교교육과 달리 특정 장소, 일정 기간을 넘어서서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시·공간에 관계없이 학습 이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누적 관리하고, 다양한 학습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학습지원-학력인정-학교 복귀 및 진로·직업탐색으로 이어지는

종합적 체제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업중단학생의 이력정보 관리는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로 이관된다. 관련 정보는 CYS-NET을 통해 통합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정보이관 시점 등의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파악 및 학습자 발굴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학력인정을 받은 이후에 상급학교 진학, 직업·진로탐색 지원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국가 수준의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 본 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을 인정하는 단편적 제도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학습자 발굴, 학습지원, 나아가 상급학교(고등학교·대학교) 진학, 진로·직업지원을 통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지속적,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합적 관점에서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기회 확대는 학교 밖에서의 학습지원과 학력인정 이후 학교 복귀나 진로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이탈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활성화가 학교이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러한 일부 악용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연령제한, 학습기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과 학력인정 사업의 의의를 고려할 때 향후 학습지원 프로그램 확대, 고등학교로의 대상 확대 등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정책연구, 시범운영 및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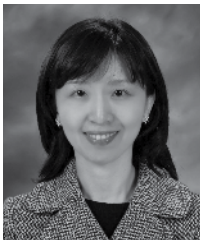
[참고문헌]

교육부(2018). 2018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시도 공통 운영지침.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8).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홍보 리플렛.

한국교육개발원 내부자료(2018). 2018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성과발표회 자료집 I .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홈페이지 https://www.educerti.or.kr



김은영 연구위원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교육행정학 전공)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 동안 교원정책,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윤희 연구원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교육행정학 전공)를 취득하였으며,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 정책중점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에 근무하고 있다. 그 동안 학교폭력예방, 인성교육 등 청소년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REPORT_01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 학력 인정 지원정책과 교육청의 역할

**김병성**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E-mail: jklin1@korea.kr

과연 학교에 '밖'이 존재할 수 있는 걸까?(지식채널e 1588회, 2018. 6. 13. 방송)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학교 안팎의 구분은 엄연한 현실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학교를 벗어나면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뀐다. 실제 계획적·조직적·계속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다고 하여도 법률이 정한 제도적 학교가 아니면 학력(學歷)을 인정받을 수 없고,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상급 학교 진학은 불가능하다.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31조 제3항에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부모에게 초등교육을 비롯한 의무교육을 받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교육에 관한 권한은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과 부모의 자녀교육권과의 관계에서 한계를 가진다. 특히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우선한다.

그러다 보니 의무교육 단계에서도 미취학이나 학업중단(제도권 학교의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음)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물론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성향 및 능력을 고려한 교육적 목적과 그에 적합한 수단으로 취학하지 않거나 학업중단을 선택한 경우도 있지만, 방임이나 학교 부적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이들 중 일부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방황 및 비행에 빠지기도 한다.

비록 소수라 하여도 학업중단으로 인해 비행에 빠지고,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경우, 그 부작용이나 향후 이들을 돌보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그런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교육적 지원이 필요할 것임은 자명함에도 공교육 차원의 투자는 부족한 편이다. 특히, 미취학이나 학업중단 이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 교

육을 받으려 해도 연령 초과 등으로 인하여 학교 복귀는 매우 어렵다. 필요에 의해 학력을 취득하려고 해도, 학교 밖에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검정고시제도가 유일한 선택 수단이며 다른 대안이 없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고, 이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었다.

이에, 2016년 8월 29일 의무교육 단계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미취학·학업중단학생 안전 확보 및 학습지원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 2017년 제주를 비롯하여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전남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2017년 11월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학력인정을 통해 고등학교를 진학한 성과(강원)도 있었다. 작년 2018년에는 충남을 포함 총 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되었고, 전국에 242명의 학습자가 등록하여 14명이 학력인정을 받았다. 2019년 올해에는 세종, 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에서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미진학인자이거나, 입학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아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로서 만 24세 미만이어야 한다.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면 홈페이지(educerti.or.kr)에서 학습자 등록을 한 후, 학습자 자격이 확인되어야 학습을 시작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학습자 등록을 하면 이후 학습자 승인(자격 확인) - 학습지원 프로그램 신청 - 학습하기 - 학력인정 프로그램 경험 수집, 정리 - 학력인정 신청의 순서로 학습지원과 학력인정이 진행된다.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두드림(자립, 학업동기 강화) 프로그램을 포함한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성교육, 교과교육, 진로체험 등의 학습지원 프로그램과 검정고시 과목합격, 자격증 취득 등의 학교 밖 학습경험, 그리고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방송통신중학교 온라인강의를 기본으로 한 교과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다.

학력인정을 신청하려면 △정해진 최소 학습 기간( • 초등학교 : 4년 이상, • 중학교 : 2년 이상, 이전에 학교를 다녔던 기간도 포함. 학습 기간 = 학교 재학 기간(학기단위) + 사업 참여 기간)을 이수하되, △최소 나이 이후( • 초등학교 :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 이후, • 중학교 : 만 16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 이후)에, △정해진 기준 학습시간(초등학교 4,692시수, 중학교 2,652시수, 이전에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시간도 80% 인정)을 모두 이수했을 때

가능하며, 학력인정평가는 4월, 10월 두 차례 실시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은 교육청의 몫이지만 이 사업에 참여할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작년 5월말 유럽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을 탐방할 기회가 있었는데, 영국은 1996년 제정한 교육법(Education Act 1996)을 통해 5세부터 16세의 의무교육 기간에 있는 청소년들이 질병이나 퇴학 등의 이유로 학교에 재학하지 못할 경우 지방정부나 지방교육청이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각 자치구별로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인 'PRU'(Pupil Referral Unit)라는 기관을 운영, 특정 기간 동안 질병 혹은 퇴학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구청은 PRU에서 교육할 학생 수를 예측하여 학생 1인당 4,000파운드(한화 약 580만 원)를 1년 예산으로 확보해 둔다고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여서 수업을 듣는 별도의 학교를 운영하는 셈이다(201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주요 선진국 정책탐방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설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2018. 6.).

또,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학령기 청소년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개개인에 대한 데이터 허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 허브 상에 아무 움직임이 없는 무업 청소년을 발굴하여 해당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학업을 중단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SNS 메시지 등을 계속 보내면서 학생들이 무엇인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연락이 닿으면 필요로 하는 파트너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순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가 되는데, 이는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한 경우이다. 교육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관리부처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수의 학교 밖 청소년이 방치되는 것이다. 개인의 선택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사이에서 법률과 제도 보완을 통해 적어도 의무교육단계까지, 더 나아가 고등학교 단계까지는 학교 밖을 벗어날 경우, 안전망을 확보하고 진로를 지원하는 차원의 연계체제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이용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다. 알고 찾아오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오지 않는 아이들을 적극 찾아가는 정책이 아쉽다.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지원 방안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시행 2년째, 정해진 교육과정이 아니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부담 없이 자신이 학습경험을 쌓아가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학력인정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적으로 14명 정도이지만 넘어서고 있지만, 아직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낯설고 다가가기 어려운 것 같다. 제도 인지를 위한 홍보도 충분하지 못하고 학력인정을 위한 요건들이 검정고시제도에 비해 용이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이 정착되고 검정고시제도만큼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역할과 지원이 절실하다.

먼저, 학교에서 학업중단(정원 외 학적 관리)이 발생할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습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원 외 학적 관리가 되거나 학업중단숙려제 후 학업을 중단할 때, 학교 밖 연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징구와 학습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학습자 등록까지 조력하여 일련의 과정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을 하더라도 검정고시 준비와 병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학력인정 취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다양한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학업중단학생들이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하여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교육청 직속기관이나 평생학습기관을 활용하여 인성교육, 교과교육, 진로체험 외에도 문화, 예술,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고 이를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당연히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자체의 개설 프로그램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감 인정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이나 참여 공고시 학업중단학생도 참여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요청한다.

셋째, 진로진학지원, 문화 체험 등 교육청 주관 프로그램 정원에 일반 학생과 별도로 일정 비율 학교 밖 청소년을 할애하여 참여의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 밖에 있다고 문제아가 아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지침도 여건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통 운영지침은 2018년 2월 제정된 후 올해 2월 개정한 것이다. 사업 담당자들이 지침을 검토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는 게 정규 학교교육의 무분별한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것과 제도의 악용 우려이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더 개방적이고 진보적이며, 융통성 있게 지침이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교 밖 청소년은 어렵게 학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은 본래 시범사업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교육적이지도 않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아이들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모두의 아이들이다. 그 아이들도 교육이 필요하고, 학교 밖에 있어도 두렵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필요하다.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열려 있어야 하고, 그 아이들이 원한다면 언제든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교육을 논할 때 같이 가져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가는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도 행복하게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면 함께 잘 살기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부족하나마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3월, 새 학년 새 학기가 곧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어느 아이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때, 학생들이 학교 안팎을 구분하지 않고 마음껏 꿈과 끼를 펼칠 수 있을 때, 아이 한명 한명이 존중받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성 장학사는 교육심리전공으로 석사를 졸업하고, 중등교사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제주학생문화원 교육연구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사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로 학업중단예방과 대안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 REPORT_02

#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지원사업의 현장에서

**국형진** | 전라남도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E-mail: yg1388@hanmail.net

2017년 여름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상의할 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전남의 해남, 광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님들과 도교육청을 방문했다. 무슨 일로 각 지역의 센터장들을 모이게 했는지 내심 궁금하던 차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접근으로의 사업에 대한 논의에 참가했던 모두가 놀라는 눈치였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사업을 관할 외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학업중단학생 특히 의무교육단계인 초·중등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의지에 놀랐다. 더구나 지원 의지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시범 사업을 학생 수가 적기로 유명한 전라남도에서 의지를 갖고 시행한다는 것에서 두 번 놀랐고, 새로운 교육감님의 강한 의지의 말씀인 '한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말씀에 세 번 놀라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사업 기획 초기, 이미 학업중단학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각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산하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와 적은 학생 수임에도 지역의 면적이 넓은 전라남도의 특성상 소수의 특정된 대상자를 위한 사업에 대한 난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뿔뿔이 흩어져있는 학생들을 찾는 방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결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한 문제들이 참가자들의 마음을 짓눌렀다.

"하긴 해야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시작된 고민은 22개 시군센터장 회의에서 논의되고 각 시군의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을 찾는 방안과 찾은 후 개입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여러 전문가와의 논의는 시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처음 시행되는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사업의 첫발을 전남교육청과 함께 용감하게 도전하게 되었다.

시범 사업이 처음 시행된 2017년 우리는 무엇보다 아이들을 도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고민의 대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방문 지도사였다. 기존 시군에 설치되어 운영되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지만, 대부분 고등학교 학업중단 대상자들에게 사업 방향이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참여하는 학업중단학생들도 10대 후반의 의무교육단계 이후 대상자들로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을 별도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6~7월 별도의 인원을 선발하여 교육 후 대상 학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거점 센터로 지정된 광양시, 해남군, 영광군 3개 시군에서 청소년 상담, 지도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를 모집하여 1주일간 집체 교육을 실시하였다. 8월 학업중단청소년의 이해, 학업중단청소년 자활 프로그램, 학업중단학생 인성 프로그램 등 대상 청소년들에 대한 소양과 함께 구체적인 개입 역량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9월 각 시군센터로부터 협조받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완료된 대상자들부터 방문하여 학력인증사업에 대한 안내와 참여를 위한 지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던 대상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가정방문과 전화 상담, 학부모 면담과 사업 안내가 개인별로 제공되면서 1개월 만에 50여 명의 대상자와 접촉하게 되고 20여명의 청소년이 학력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참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업이 중단된 현실을 보게 되었다. 먼저 초등 단계의 학업 중단 학생은 가장 많은 비율이 유학이나 대안학교 입학에 속하였고, 소수의 학생이 질병이나 홈스쿨링 등에 참여하는 것이 조사되었다.

하지만 중등 단계의 학업중단 학생부터 그 특징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물론 유학이나 홈스쿨링, 대안학교로의 진학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나 이후 학생들의 경우 은둔형이나 비행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공히 가정 내의 문제가 동반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장기간 학업중단 기간이 지속되어 학업 복귀가 불가능하고, 검정고시를 치르기에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면서 학업중단 학생 중에서도 상당히 개입과 지원이 어려운 상태의 대상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역시 답은 현장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장기간 지속적인 개입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방문 지도사의 지속적인 유선접촉과 현장 방문, 학부모 면담 등을 통해 하나하나 설득하는 과정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며, 학력인증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마침내 10월에는 15명 정도의 청소년들과 함께 그동안 누릴 수 없었던 체험학습 여행과 수학여행을 3차례 진행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설레는 행사이지만, 학업이 중단되어 수년간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청소년들에게는 오랜만에 경험하는 집단 활동과 즐거운 체험 활동이 학력인증에 대한 기대감과 응집력을 갖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경험하는 진로 체험 여행에서도 수차례 함께 한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만나는 여행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즐겁게 체험 활동을 진행했던 것을 기억하면 지금도 벅찬 마음이 생긴다.

그렇게 청소년들과 현장에서, 체험학습에서 함께 했던 방문 지도사 선생님들과 전남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선생님들의 협조로 드디어 2018년 3명의 1회 학력인증대상자를 배출하게 되었다. 인증자들은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다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시범사업이 아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다짐을 만들어주었다.

그렇게 전남교육청과 전남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2019년까지 연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처음 시범사업으로 출발하면서 함께 했던 광양, 해남, 영광 3개 거점센터 6명의 방문 지도사는 2019년 광양, 나주, 영광, 곡성 4개 지역 8명의 방문 지도사를 운영하는 정식 사업이 되었다.

또한 기존의 집단으로 운영되던 문화체험과 수학여행은 은둔형 및 생계형 학업중단학생들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개별 문화 체험과 각 시군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분산되어 근거리 지원을 용이하게 하도록 변화하였다. 또한 전남교육청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지역별 학업중단학생 현황을 공유하여, 방문 지도사들이 대상자를 찾는 데 좀 더 용이하게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벌써 3년째 현장에서 숙성되고 있는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지원사업을 보면서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교육 수장의 의지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고 있다. 하지만 어떤 사업도 명암이 있듯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은둔형이나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방문 지도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아직도 더욱 성장해야 한다. 또한 차량을 이용하여 먼 거리를 이동해 대상자를 만나는 방문 지도사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대상자 중에서 장기 미연고자나 가출 등 위기가 예상되는 대상자의 안전에 관련된 매뉴얼 등을 준비하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계속하여 성장하고 있는 의무교육학업중단학생 지원사업이 안정화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꾸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게 노력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어두움을 밝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떳떳하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촛불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들의 곁에서 고락을 같이하며 애쓰고 계신 교육 가족 여러분과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선생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비록 학교는 아니지만,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든 학업중단학생들에게도 지금의 상황에서 행할 수 있는 최선을 깨닫는 지혜와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로 여러분을 잊지 않는 선생님들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세워나가시길 마음 깊이 기원한다.



국형진 센터장은 상담학전공으로 석사를 졸업하고, 청소년 복지전공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청소년상담사로 청소년복지현장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있다. 전라남도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 진로지도, 방과후, 학교밖청소년, 메이커 스페이스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사업을 펼치고 있다.

[미국]

# 미국 정부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정책 탐구



**김지혜** | 교육정책네트워크 해외통신원
E-mail: jhkim9114@psu.edu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이 더 높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Out-of-school youth)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학업중단 학생을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의 주 대상 집단으로 삼고 이들을 위한 전방위적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들의 범위는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 지원부터 미혼모 학생에 대한 양육 지원까지 다양한데, 대부분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요인에 직접 개입하는 예방적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위기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했더라도 다시 정규학교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미 정규학교를 벗어나 있는 학생들에 초점을 두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미국의 학력인정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미국의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본 절에서는 먼저 미국의 국가 통계 자료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NCES)는 매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 및 이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 및 공개하고 있다. 미국은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의무교육 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 문제는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주요 교육정책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국가교육통계센터(NCES)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만 16~24세 청소년 중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은 6.1%로 나타났다(McFarland, Cui, Rathbun, & Holmes, 2018). 동일 지표의 추이 변화를 보면 1970년에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은 15%였으나, 1980년에는 14.1%, 1990년에는 12.1%, 2000년에는 10.9%, 2010년에는 7.4%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Child Trends Data Bank, 2015). 특히 청소년 학업중단 비율의 인종별 격차는 그동안 미국 교육정책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는데, 히스패닉 학생들의 학업중단 비율 감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주요한 긍정적 효과로 여겨지고 있다.

## 미국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정책

본 절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 가운데 학력인정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나는 대안 시험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 이수 학력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정규 교육과정의 이수 예외 규정 등에 근거를 두고 학교 외에서 받은 교육내용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같이 인정받는 방법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방법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와 같은 시험인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GED)와 같은 대안 학력인정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고,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홈스쿨링 학생들의 교육내용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있다.

### 1) 대안 학력인정 시험: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GED)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대안 학력인정 프로그램(Alternative high school credential programs)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GED)' 시험은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졸업학력에 해당하는 학력을 획득할 기회를 주는 시험으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GED 시험은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교육협회(American Council on Education)와 피어슨(Pearson) 사의 합작 기업인 GED Testing Service(GEDTS)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미국 내 대부분의 고등교육기관과 기업들이 GED 시험을 통해 획득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GED 시험은 1942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읽기(Reading), 쓰기(Writing), 수학(Mathematics), 과학(Science), 사회(Social studies)의 5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2013년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만 16세 이상 인구 중 약 816,000명이 GED 시험에 응시했으며 그 가운데 약 541,000명(응시자의 약 76%)이 시험을 통과하였다(McFarland et al., 2018).

**2) 홈스쿨링(Homeschooling) 학력인정**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학교교육이 여러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학업중단을 선택한 청소년 가운데 일부는 홈스쿨링(Home schooling)에 참여하고 있는데, 미국은 물론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홈스쿨링 참여 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만 5-17세 학생 중 홈스쿨링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3.4%로 조사가 처음 시행된 1999년(1.7%)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때 홈스쿨링 참여 학생의 비율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와 학교에 재학은 하고 있지만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25% 이하이면서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를 통해 산출된다. 학생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홈스쿨링을 받는 학생들의 83%는 백인 학생이었고, 89%가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dford, Battle, & Bielick, 2017).

1980년대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홈스쿨링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았고, 1993년까지만 해도 일부 주는 여전히 홈스쿨링을 불법으로 규정하였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에서 홈스쿨링은 엄연한 교육의 한 형태이자, 학교 선택(School Choice)의 한 축으로 인정받고 있다(Prothero, 2018).

주 정부별 교육위원회의 연합체인 주교육위원회연합(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ECS)은 홈스쿨링 참여 의사 고지, 교수자 자격, 의무 이수 교과, 출결 관리, 평가 관리, 공립학교 활동 참여, 온라인 학교 참여 등에 관한 주 정부별 규정 내용을 조사하였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홈스쿨링을 의무교육 참여로 인정하는 정책, 즉 홈스쿨링에 대한 학력인정 정책은 주별로 상당히 다르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별 규정에 따라 홈스쿨링은 별도의 학교 형태로 다뤄지는 경우도 있고, 사립학교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먼저 대부분의 주에서 홈스쿨링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가정의 학부모는 매년 홈스쿨링 참여 의사를 지역 교육 당국에 고지해야 하며, 대부분의 주는 학부모가 직접 홈스쿨링을 지도할 것을 요구한다. 일부 주는 반드시 학부모가 홈스쿨링을 지도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교수자의 자격을 고등학교 학력 이상 소지자로 제한하기도 한다. 의무로 이수해야 할 교과 내용은 주로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과목 등이며, 몬타나(Montana)와 같은 일부 주는 학생들의 학년에 따라 의무 이수 교과의 내용을 다르게 규정하기도 한다(Wixom, 2015).

절반 이상의 주가 홈스쿨링 시 출결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주로 공립학교 수준의 출석 일수를 확보하기를 요구한다.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주는 미국 전체 주 중 절반 이하이다. 해당 주들 가운데 20개 주는 학생의 학업적 향상도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그 가운데 12개 주는 구체적으로 학생이 표준화된 형식의 시험에 응시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표준화된 시험을 의무화하지 않는 주에서는 학생 포트폴리오 등을 평가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Wixom, 2015).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홈스쿨링을 받는 학생들이 정규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학업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교과 외 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에는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많은 주가 필요한 경우 홈스쿨링을 받는 학생들이 주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Wixom, 2015). 위와 같이 주별로 규정하고 있는 홈스쿨링에 대한 조건 및 규정을 충족할 경우 해당 학생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같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시사점

미국의 연방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원인 요인에 직접 개입하는 예방적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가령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위기 학생들, 즉 저소득층 학생 혹은 미혼모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해 기본적인 생활 지원부터 학업 및 멘토링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제도권 교육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돕고,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했을지라도 다시 정규 교육과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 목표로 한다. 그러나 그러한 복지 정책과 함께 위와 같이 이미 학교를 벗어난 학생들에 대한 학력인정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즉, 예방적 차원의 정책과 사후 처방적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사용 중이다.

미국은 학교의 형태를 가지고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뿐 아니라, 홈스쿨링

을 하는 경우도 학교 선택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학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점차 한국 학부모 및 학생의 교육적 요구도 다양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미국의 사례가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중등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학업중단 학생의 학력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향후 학생들의 진로 설계 및 직업 탐색에 상당히 중요한 지원책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전국 규모의 데이터를 이른 시기부터 구축하여 조사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학업중단 사유를 고려한 복지 정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히스패닉 학생과 같이 특히 학업중단 문제가 심각한 집단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문제를 진단함으로써 특정 대상 집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문제 현상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이를 위한 정책 투자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한다면 더 효과적인 정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백혜정, 송미경, 신정민(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5-R09.

Child Trends Data Bank (2015). High school dropout rates: Indicators on children and youth.

McFarland, J., Cui, J., Rathbun, A., and Holmes, J. (2018). Trends in High School Dropout and Completion Rates in the United States: 2018 (NCES 2019-117).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U.S. Department of Education.

Prothero, A. (2018, January 10). Homeschooling: Requirements, research, and who Does. Education Week (January 10, 2018). https://www.edweek.org/ew/issues/home-schooling/index.html에서 2019. 02. 12. 인출.

Redford, J., Battle, D., and Bielick, S. (2017). Homeschooling in the United States: 2012 (NCES 2016-096.REV).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U.S. Department of Education.

Wixom. M. (2015). State homeschool policies: A patchwork of provisions. 50-State reviews.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김지혜 선생은 중앙대학교에서 교육학과 학사 및 교육행정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교육정책(Education Policy Studies) 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교육정책 국제비교 연구, 교원정책, 교육 불평등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본]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일본의 학력 인정 프로그램

**김지영** | 교육정책네트워크 해외통신원
E-mail: kjytokyo@gmail.com

## 들어가며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등교(결석일수가 30일 이상인 장기결석자)'라는 개념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부등교 학생에 대한 지원 목표를 학교복귀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프리스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 외 기관의 상담이나 지도도 원적교의 출석인정 또는 단위인정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만 계속 증가하는 부등교 학생 수에 대한 문제 인식이 공유되고 프리스쿨 등 다양한 민간기관의 실천이 축적됨에 따라 정부도 기본방침은 고수하고 있지만, 예전보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방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 부등교 및 중퇴자 현황

2017년도 기준 일본의 초·중·고등학교 부등교 학생 수의 현황은 다음의 <표 1>, <표 2>와 같다. 이에 따르면 결석일수 30일 이상인 초·중·고등학교의 부등교 전체 학생 수는 약 16만 명에 이르고, 고등학교 중퇴자 수는 46,802명이다. 초등학교 0.54%(185명당 1명), 중학교는 3.25%(31명 당 1명)로 중학교의 부등교 학생이 수도 가장 많으며 비율도 높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초·중학교 모두 최근 5년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는 사립(12,901명, 전체 사립고등학교 학생 수의 1.16%)보다 공립(37,493명, 전체 공립 고등학교 학생 수의 1.68%)이 많으며, 단위제 고등학교인 경우 그 격차는 더욱 크다. 다만 고등학교 부등교 학생 수의 연도별 추이는 감소추세에 있다.

**<표 1> 초·중·고등학교 출·결석 일수별 부등교 학생 수**

| 구분 | 결석일수 30-89일 | 결석일수 90일 이상 출석일수 11일 이상 | 결석일수 90일 이상 출석일수 1-10일 | 결석일수 90일 이상 출석일수 0일 | 부등교 학생 수 |
|---|---|---|---|---|---|
| 초등학교 | 19,057 (54.4%) | 13,555 (38.7%) | 1,464 (4.2%) | 956 (2.7%) | 35,032 (100%) |
| 중학교 | 40,983 (37.6%) | 54,362 (49.9%) | 9,373 (8.6%) | 4,281 (3.9%) | 108,999 (100%) |
| 고등학교 | 11,364 (68.9%) | 4,011 (24.3%) | 778 (4.7%) | 348 (2.1%) | 16,501 (100%) |

출처: 문부과학성(2018)의 내용을 필자가 재구성함.

**<표 2> 고등학교 중퇴자 수**

단위: 명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국립 | 44 (0.4%) | 43 (0.4%) | 51 (0.5%) |
| 공립 | 31,083 (1.3%) | 29,531 (1.3%) | 28,929 (1.3%) |
| 사립 | 18,136 (1.6%) | 17,675 (1.5%) | 17,822 (1.5%) |
| 계 | 49,263 (1.4%) | 47,249 (1.4%) | 46,802 (1.3%) |

출처: 문부과학성(2018)의 내용을 필자가 재구성함.

## 부등교 및 중퇴자 지원대책

1992년 9월 24일 '등교거부문제에 대한 대응'(통지)으로 적응지도교실을 설치하고, 의무교육학교의 등교거부학생이 학교 외 공적기관이나 민간시설에서 상담, 지도를 받을 경우 지도요록상 출석 취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5월 16일 '향후 부등교에 대한 대응'(통지)으로 학교 내 지도체제를 충실히 하고, 교육지원센터의 정비를 충실히 하며, 민간시설 등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정보수집 및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10월 1일 구조개혁특별구역법에 의해 학교설치 비영리법인에 의한 학교설치사업이 추진되었고, 2005년 7월 6일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부등교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학교설치에 관한 교육과정탄력화 사업 전국화 및 IT 등의 활용에 의한 부등교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사업 전국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2009년 3월 31일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전일제, 정시제과정에서 부등교학생을 대상으로 통신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36단위를 상한으로 단위인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의 <표 3>은 2017년도에 학교 내·외의 기관에서 상담이나 지도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를 나타낸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외에서 상담, 지도를 받은 학생은 초·중·고등학교 모두 약 5만 명 정도이다.

**<표 3> 학교 내·외의 기관에서 상담, 지도를 받은 초·중·고등학생 수**

| 구분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 학교 외 | 교육지원센터 | 3,477 | 13,631 | 264 |
| | 교육위원회 소관기관(교육지원센터 제외) | 3,568 | 5,591 | 361 |
| | 아동상담소, 복지사무소 | 1,840 | 3,690 | 698 |
| | 보건소, 정신보건복지센터 | 293 | 433 | 197 |
| | 병원, 진료소 | 3,916 | 8,898 | 5,930 |
| | 민간단체, 민간시설 | 1,030 | 2,137 | 314 |
| | 그 외 기관 등 | 788 | 1,668 | 434 |
| | 학교 외 기관 상담, 지도 실제 학생 수 | 11,952 | 31,383 | 7,674 |
| 학교 내 | 양호교원의 전문적 지도 | 8,021 | 22,947 | 10,973 |
| | 학교 카운슬러, 상담원 등의 전문상담 | 14,677 | 41,186 | 14,644 |
| | 그 외 상담, 지도를 받은 실제 학생 수 | 18,519 | 53,664 | 20,898 |
| 이상의 상담, 지도를 받지 않은 학생 수 | | 7,343 | 26,753 | 18,268 |

출처: 문부과학성(2018)의 내용을 필자가 재구성함.

이 중 학교 외 기관에서 상담, 지도 등을 받아 지도요록상 출석취급 처리된 학생 수는 초등학교 3,941명, 중학교 16,405명이며, 자택에서 IT 등을 활용한 학습활동으로 지도요록상 출석취급 처리된 학생 수는 초등학교 36명, 중학교 113명이다.

즉 일본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는 부등교 학생을 위한 정책으로는 교육과정 탄력화에 의한 부등교 특례교의 설치, 학교 내 지도체제 충실(개별지도계획의 작성 등), 교육지원센터의 충실, IT를 활용한 자택학습, 프리스쿨과의 연계, 방문형 지원, 통신교육을 통한 고등학교의 단위인정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다음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가나가와현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단위인정 프로그램과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 고등학교 단위인정 프로그램 사례

가나가와현에서는 2010년도에 '현립고등학교 부등교학생 단위인정 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부등교학생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프리스쿨을 운영하는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고등학교를 단위로 인정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이나 취업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학교 밖의 체험활동을 단위로 인정하는 것을 통해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워 자신감을 잃기 쉬운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갖도록 하여 사회적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3개의 비영리활동법인 '쿠지라구모', '어린이와 생활문화협회', '앙가쥬만 요코스카'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런데 '쿠지라구모'는 장애가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통합양육훈련, 놀이, 아트세라피를 실시하고 있는 단체로, 단위인정을 받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참가학생이 장애학생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어린이와 생활문화협회'는 시민농원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농원, 밭, 과수원 등에서 어린이들이 지도를 받으면서 토양 만들기부터 수확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NPO 스태프 업무에 참가해 시민활동이나 사회활동에 대해 학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단위인정 프로그램으로는 농업체험과 취업체험을 제공했다.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규정에 의하면 1단위 이수 조건이 주 1회 50분 수업을 35주간(50분*35회=1,750분, 1단위) 수강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해당 단체는 하루 6시간의 체험활동을 5일간 실시하여 총 1,800분(360분*5일=1,800분, 1단위)의 시간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참가 학생 중에는 3단위를 이수한 사례도 있었다. '앙가쥬만 요코스카'는 해당단체가 경영하는 서점에서 직업체험을 하거나, 상점가의 이벤트 준비, 청소활동 등의 지역공헌으로 사람들과 만나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가나가와현은 해당 사업을 실시한 이후 참여한 NPO 단체와 현교육위원회 담당부서에서 각각 협동사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단체와 현교육위원회은 사업목적의 달성 상황, 실적 및 성과, 협의 상황, 역할분담 등에 대한 상호평가를 실시하여 공개하였다.

## 시사점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부등교 학생에 대한 지원은 최종적으로 학교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기 발견과 대응, 학교 카운슬러나 양호교원 등을 통한 학교 내의 상담과 개별지도계획 작성, 교육과정 편성의 탄력화를 통한 부등교 특례교 등을 중심으로 학교 내의 지도체제를 충실히 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부등교 학생의 수와 원인을 파악하고,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하여 부등교 예비군 학생에게 조기 대응을 하는 것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는 프리스쿨, 통신교육 등 학교 외 기관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석인정이나 단위인정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방문형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 기관에 위탁을 통해 맡기면 그만인 식이 아니라, 학교 밖 기관과 학교의 대면 연계를 통해 좀 더 명확한 역할분담과 긴밀한 정보공유를 하려고 노력한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교원을 프리스쿨이나 민간 NPO에 일 년 정도 장기파견하는 경우나 카나가와현처럼 연계기관 상호평가를 실시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학교 외 기관, 학교, 교육위원회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은 현재도 학교 내외 어느 곳에서도 상담,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이 약 5만 명이 있다. 기존의 학교라는 교육시스템 그 자체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우선 현실을 직시할 때, 저조한 출산율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적 자립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은 큰 사회적 손실이다. 더구나 학생 개인의 입장에서도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쉽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우리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과 복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가나가와현 현립고등학교 부등교학생 등 단위인정 프로그램 작성사업. (神奈川県　県立高校不登校生徒等単位認定プログラム作成事業について)http://www.pref.kanagawa.jp/docs/vn7/cnt/f7157/index.html
문부과학성(2014a). 부등교학생 지원에 관한 최종보고(文部科学省 ( 2014 ) 不登校児童生徒への支援に関する最終報告) 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shingi/toushin/_icsFiles/afieldfile/2016/08/01/1374856_2.pdf
문부과학성(2014b). 부등교학생 지원에 관한 최종보고 별첨자료(文部科学省 ( 2014 ) 不登校児童生徒への支援に関する最終報告　別添資料). 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shingi/toushin/_icsFiles/afieldfile/2016/08/01/1374856_4_1.pdf
문부과학성(2016). 부등교학생에 대한 지원(통지, 2016.9.14.)(文部科学省 ( 2016 ) 不登校児童生徒への支援の在り方について ( 通知、平成28年9月14日 ) http://www.mext.go.jp/a_menu/shotou/seitoshidou/1375981.htm
문부과학성(2017a). 부등교학생을 위한 학습 등에 대한 충실한 지원(통지, 2017.3.28.)(文部科学省 ( 2017 ) 不登校児童生徒による学校以外の場での学習等に対する支援の充実について ( 通知、平成29年3月28日 )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otou/107/houkoku/attach/1388331.htm
문부과학성(2017b). 부등교학생을 위한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충실한 학습지원 방안-개별 학생의 상황에 맞는 환경만들기(文部科学省 ( 2017 ) 不登校児童生徒による学校以外の場での学習等に対する支援の充実について - 個々の児童生徒の状況に応じた環境づくり)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shingi/toushin/_icsFiles/afieldfile/2017/07/25/1382195_2.pdf
문부과학성(2018). 2017년도 학생의 문제행동, 부등교 등 학생지도상의 여러 문제에 관한 조사결과(文部科学省 ( 2018 ) 平成29年度　児童生徒の問題行動·不登校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結果について) http://www.mext.go.jp/b_menu/houdou/30/10/_icsFiles/afieldfile/2018/10/25/1410392_1.pdf http://www.mext.go.jp/b_menu/houdou/30/10/_icsFiles/afieldfile/2018/10/25/1410392_2.pdf

김지영 선생은 일본 도쿄대학대학원에서 교육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한국교육개발원 해외통신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PSJ総合教育支援オフィス에서 근무하고 있다. 관심 연구 분야는 교육제도, 교원정책, 교육행재정 등이다.

#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통계

**한효정**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E-mail: hjhan41@kedi.re.kr

학교 밖 청소년이란 1)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3)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정의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파악은 유사한 개념인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파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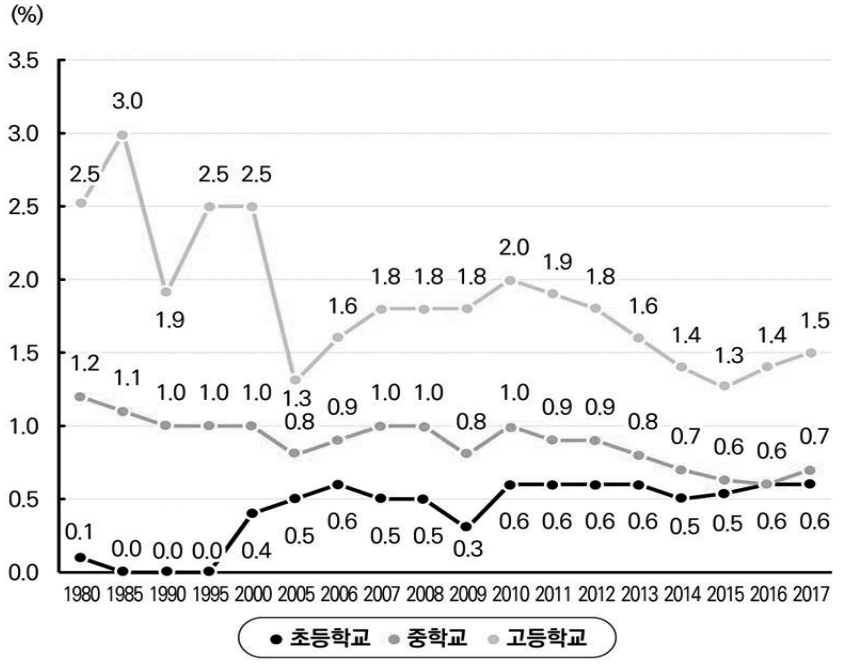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서비스에서는 초·중등교육기관의 학업중단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2018년도에 발표된 자료를 소개한다. 먼저, 청소년 학업중단율의 연도별, 학교급별 추이를 다음 <표 1> 및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중단율은 1990년도 이후로는 1%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보다 높은 학업중단율을 보이고 1985년도에는 3%까지 이르렀으나, 2010년도 이후로는 2%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0.6%(16,422명), 중학교 0.7%(9,129명), 고등학교 1.5%(24,506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연도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단위: 명, %

| 년도 | 초등학교 | | | 중학교 | | | 고등학교 | | |
|---|---|---|---|---|---|---|---|---|---|
| | 재적 학생수 | 학업 중단자 | 학업 중단율 | 재적 학생수 | 학업 중단자 | 학업 중단율 | 재적 학생수 | 학업 중단자 | 학업 중단율 |
| 1980 | 5,658,002 | 3,856 | 0.1 | 2,471,997 | 30,628 | 1.2 | 1,696,792 | 43,088 | 2.5 |
| 1985 | 4,856,752 | 1,636 | - | 2,782,173 | 29,410 | 1.1 | 2,152,802 | 63,841 | 3.0 |
| 1990 | 4,868,520 | 1,299 | - | 2,275,751 | 22,348 | 1.0 | 2,283,806 | 42,542 | 1.9 |
| 1995 | 3,905,163 | 1,219 | - | 2,481,848 | 24,567 | 1.0 | 2,157,880 | 53,743 | 2.5 |
| 2000 | 4,019,991 | 14,734 | 0.4 | 1,860,539 | 19,097 | 1.0 | 2,071,468 | 52,136 | 2.5 |
| 2005 | 4,022,801 | 18,403 | 0.5 | 2,010,704 | 15,669 | 0.8 | 1,762,896 | 23,076 | 1.3 |
| 2010 | 3,299,094 | 18,836 | 0.6 | 1,974,798 | 18,866 | 1.0 | 1,962,356 | 38,887 | 2.0 |
| 2015 | 2,714,610 | 14,555 | 0.5 | 1,585,951 | 9,961 | 0.6 | 1,788,266 | 22,554 | 1.3 |
| 2016 | 2,672,843 | 14,998 | 0.6 | 1,457,490 | 8,924 | 0.6 | 1,752,457 | 23,741 | 1.4 |
| 2017 | 2,674,227 | 16,422 | 0.6 | 1,381,334 | 9,129 | 0.7 | 1,669,699 | 24,506 | 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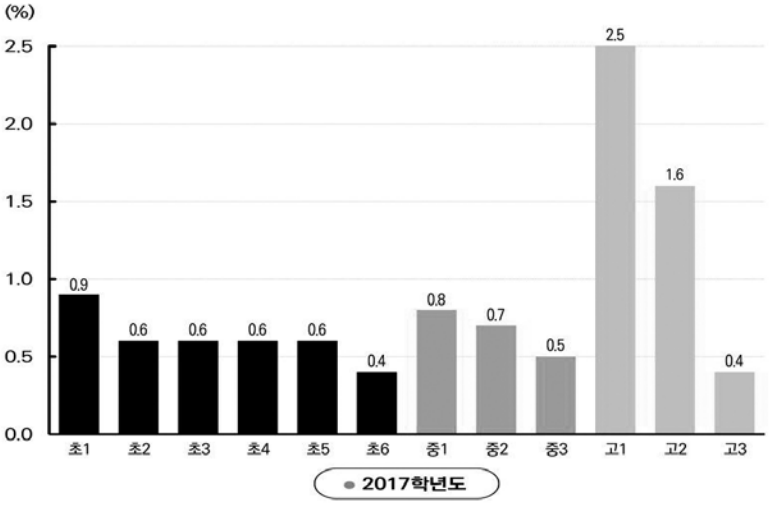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8)의 p. 55 <표 Ⅱ-6-1>을 재구성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8). p. 54.

[그림 1] 연도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다음으로 [그림 2]은 2017년도 기준 학년별 학업중단율을 보여주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최초 학년의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의 학업중단율은 2.5%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 성별 학업중단율을 살펴본 결과, 각급 학교에서 학업중단 남녀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학업중단에 유의미한 성별 차이는 없음을 추측할 수 있다. 지역별 학업중단율에서 역시 명확한 패턴을 발견할 수는 없었으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대·중·소도시일수록, 고등학교에서는 읍·면·도서벽지일수록 학업중단율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8). p. 54.

**[그림 2] 학년별 학업중단율(2017학년도)**

앞의 학업중단 자료는 횡단적 현황을 보여주는 반면, 전체 2014년 기준 7세에서 18세 학령기 학생 중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약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윤철경, 성윤숙, 최홍일, 유성렬, 김강호, 2017). 또한 학업중단 이후 학생들을 추적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업중단 패널 조사(2013-2015)"에 따르면, 학업중단 이후 학생들의 행보는 크게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 은둔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2> 참조). 해당 패널에서 2012년 6월 이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3년간 추적한 결과 학업형 청소년의 비율이 50.4%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직업형 32.4%, 무업형, 11.1%, 비행형 6.0%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 비율(학업중단 이후 3개년간 이행 경로 기준)

| 구분 | 정의 | 비율 |
|---|---|---|
| 학업형 | 검정고시 공부, 대학입시 준비, 복교 등 | 50.4% |
| 직업형 | 직업기술을 배우는 경우, 아르바이트·취업 등 | 32.4% |
| 무업형 | 특정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 11.1% |
| 비행형 | 가출하거나 보호시설·사법기관 감독 받는 경우 | 6.0% |
| 은둔형 |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 *미조사 |

출처: 윤철경, 성윤숙, 유성렬, 김강호(2015)의 p. 3을 재구성

학업중단은 학교 밖 청소년 개인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인적자원 손실, 범죄율 증가 등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정부 관계부처 합동,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전문기관의 도움도 거의 받지 못하여 온 실정이다(윤철경 외, 201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지원 정책 마련 등을 통해 이들을 재조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4호, 2018. 1. 16., 일부개정)
윤철경, 성윤숙, 유성렬, 김강호(2015).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성윤숙, 최홍일, 유성렬, 김강호(2017).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부 관계부처 합동(2015).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한국교육개발원(2018).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유·초·중등교육통계편.

# 교육정책네트워크

개방, 공유
소통, 협력

**교육정책네트워크**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관련 유관기관 간의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제를 말합니다.**

http://www.edpolicy.net

QR코드로 교육정책네트워크를 간편하게 만나보세요.

##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하는 일

### 교육정책발굴

-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교육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 정책 · 현장지원

- **교육정책 토론회**
- **교육정책 컨설팅**
- **교육현장 모니터단**
- **교육현장지원연구**





### 교육정보 공유

다양한 교육이슈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소통의 장 제공




(월간)교육정책포럼

10개국의 최신 교육뉴스 및 교육정책 자료 제공



메일진 해외교육동향

주요 교육쟁점에 대한 분석 및 방향 제시




이슈페이퍼

외국의 교육정책 분석 및 시사점 수록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mailzine@kedi.re.kr로 구독신청을 하시면 매월 신속하고 질 높은 국내외 교육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방문하시면 자세한 설명과 다양한 교육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교육정책네트워크